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34조원+α추경 합의…손실보상을 100% 실현

긴급생활지원금 한시적 75만원~100만원 지원 결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4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없이 기존 예산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α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향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37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손실지원금은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다만

당정은 소급적용에 관해선 현행 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키포인트는 600만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서 600만원+α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성 정책위원장은 "방역지원금으로 이미 400만 원 지급을 해서 나머지 6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공약"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

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기존 손실보상 범위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업황에 따라 우대지원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범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빠짐없이 지원 받는다.

아울러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 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동시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이 정부에 요청했다. /뉴스

광주시장 야당 후보들 노동정책 '공감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각 정당 광주시장 후보들의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4대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노·정 교섭 정례화, 공공의료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뜻을 함께 한다면서도 각론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0일 6·1지방선거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후보들에게 질의한 노동 현안·정책에 대한 후보별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노조는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노·정 교섭 정례화 ▲돌봄 노동자 임금·쳐우개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지원 ▲기후 정의 실현 ▲중대재해 예방·관리 관련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공공의료 강화·의료 인력 확충 ▲비정규직 고용 안정 ▲민간 위탁 공공사업 직영화 ▲필수노동자 고용 안정·권리 보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가 건립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를 제외한 4대 야당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보냈다. 네 후보 모두 10대 노동정책 입장에서 민주노총 측 입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후보들은 구체적 해법에선 일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정 교섭 정례화를 놓고 민주당 강기정 후보는 시·유관기관·노조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정의당 장연주 후보도 시·노동계 정례교섭을 약속했다. 진보당 김주업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노동부시장·국립 노동 전담 부서 신설까지 공언했다. /김도기 기자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공천 취소 무공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금품제공 의혹이 불거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강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강진군수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강 후보가 최근 강진 지역 한 식당에 방문할 당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으며, 강 후보는 본인과 관련이 없는 시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대위 결정에 따라 강진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강 후보와 이승옥 후보 등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통합선대위 출범식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비롯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간판' 내세운 민주당, 선대위 출범… “8곳 승리 목표”

李 “일(1)하고 싶어…길 없어도 여는 게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이 상임고문을 지방선거를 총괄지휘하는 사령관으로 내세워 승부수를 건 모양새다.

대선 패배 두달만에 인천 계약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정치일선에 복귀한 이재명 고문이 지방선거 승리에 정치적 명운을 건 가운데 목표로 제시한 광역단체장 '과반(9곳)' 혹은 8곳 승리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고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박지현·윤호중·공동 비상대책 위원장이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맡았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17개 시

도지사 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예의 '일꾼론'을 펴며 겸치 손기락을 치켜세우고 "국민 여러분 일하고 싶다. 이제 일(1)할 사람, 일꾼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제가 사설 어떤 장소에 가든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정말 어려웠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출발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길이 없어 보여도 길을 만들어내는 것,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퍽색이 짙을 때 승리의 활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대선 패배 직후 계약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등판한 것에 대한

비판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8곳 승리를 기션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당초 이재명 고문이 계약을 출마를 선언하며 '전국 과반 승리'를 언급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김민석 총괄본부장은 "오늘 여론 조사를 보면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 전남·북, 제주, 세종 등 5곳에서 승리한다고 나온다"며 "여기에 경기도와 최대 경전지인 수도권 3곳의 과반을 기를 인천, 탁월한 후보가 출마한 강원, 충청권 4곳 중 한두 곳을 더해 6·7곳에서 승리하면 '선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우리 가 가졌던 계약과 원주갑, 제주를 3곳을 지키면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8곳 승리를 '1차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빨리 달성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태풍이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 없다"고 했다.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 피해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희 종교다문화 비서관 등이 반지성주의의 대표 주자들"이라며 "(윤석열은)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시라"고 밝힌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보상금이 밀린 화대라느니, 동성애 치료라느니 망언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즉각 해임 조치하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인사'에서 겹침 권리 남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조적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과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찾아볼

尹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

주미대사관 참사·공사…1차장 권춘택



김규현(왼쪽) · 권춘택

원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신상, 도덕성 외에 대북, 정보 등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

권 전 공사는 국정원 공체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근무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과의 협력을 담당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1차장에 적격이라는 평가다.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권 전 공사는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

/뉴스

여야, 원내수석 회동 이견…한덕수 인준 평행선

민주 “한덕수 여전히 부적격”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그런 면에서 정국을 원만하게 운영해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각 정당에서 또 모색해서 또 만나기로 얘기를 모았다"고 했다.

진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한동훈(법무부 장관)·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면 인준에 참여하겠다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연계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저희는 여전히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종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무를 양당이 모두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정국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그는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저희는 여전히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종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무를 양당이 모두 갖고 있다"고 답했다.

'겸수완박·검찰 수사권 전환 박탈'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도 여전히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의원 회관서 5·18 특별전 '전진하는 오월'

16~22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18 기록물 전시

각종 문서자료와 5·18 당시 활용된 영상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된다.

'전진하는 오월'이라는 전시명은 모든 사람이 함께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고 신영복의 서체로 기록해 5·18 정신인 연대의식을 강조했다.

홍인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은 11일 "이번 전시가 오월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호 매 만 풍

이태현

